

## 혁신도시 재검토 반대 결의안

의안 번호	623
----------	-----

제안연월일 : 2008년 4월 24일

제안자 : 황세영 의원외 명

### 1. 주 문 : 별 첨

### 2. 제안이유

가. 혁신도시 정책은 지난 2005년 6월 참여정부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176개 공공기관을 대전을 제외한 12개 광역시·도로 분산하는 정책에 의하여 울산을 비롯한 전국 12개 지역별로 추진되고 있으며, 대부분 수 조원의 보상금이 이미 지급되어 토지보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나. 울산 혁신도시 또한 함월산 자락의 2,984천㎡ 규모에 한국석유공사 등 11개 공공기관과 관련 기업 및 연구기관이 자리잡을 터전으로 보상이 66.1%인 2,465천억원의 협의 보상금이 이미 지급된 상태에서 지난해 12월 기공식을 시작으로 1공구 공사가 이미 착공되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다.

다. 그동안 우리 중구는 구도심 슬럼화에 따른 상권침체와 바닥에 허덕이는 지방재정 여건 하에서 혁신도시 건설이야말로 유일한 희망으로 생각해 왔으며, 우리 중구의회에서도 24만 구민의 염원을 담은 혁신도시건설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혁신도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고 있으며, 지역주민들도 자손대대로 살아온 삶의 터전까지 내어주는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국책사업에 적극 협조해 오고 있다.

라. 이러한 지역현실을 무시한 채 최근 정부에서는 경제활성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하에 전면적인 수도권 규제완화와 공기업의 민영화 및 통·폐합을 연계시켜 수년간 정부와 이전기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로 추진해 온 혁신도시 건설을 이제 와서 재검토 운운하는 소모적인 국가균형발전 훼손 논쟁을 하고 있다.

마. 이에 우리 중구의회에서는 혁신도시 재검토 논쟁을 즉각 중단하고 110만 시민의 염원인 혁신도시 건설이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 의원의 뜻을 모아 결의하고자 한다.

### **3. 결 의 문 : 따로 붙임**

## 혁신도시 재검토 반대 결의문

- 소모적인 국가균형발전 훼손 논쟁을 전면 중단하고  
차질 없는 혁신도시 건설사업을 촉구한다 -

정부는 전국의 모든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에 규제완화를 완화한다고 하면서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추진중인 혁신도시 건설사업의 수정·보완과 함께 공공기관 민영화를 들고 나와 사실상 혁신도시 건설사업에 찬물을 끼얹은 과오를 스스로 범하고 말았다. 이에 110만 울산시민과 24만 중구 주민은 경악하고 있다.

혁신도시 정책은 지난 2005년 6월 참여정부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176개 공공기관을 대전을 제외한 12개 광역시·도로 분산하는 정책에 의하여 정부기관의 타당성 검토와 대국민 토론회, 정부와 공기업 지방자치단체간 협약을 거쳐 모두가 공감하는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 혁신도시 건설계획이 확정된바 있다.

지역발전의 구심점이 될 국책사업인 혁신도시의 건설은 이미 12개 지역별로 추진되고 있으며 대부분 수조원의 보상이 지급되어 마무리 단계에 있고 울산혁신도시 또한 함월산 자락의 2,984천㎡ 규모에 한국석유공사 등 11개 이전 공공기관과 관련 기업 및 연구기관이 자리 잡을 터전으로 보상이 66.1%인 2,465억원의 협의 보상금이 이미 지급된 상태에서 지난해 12월 기공식을 시작으로 1공구 공사가 이미 착공되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다.

그동안 우리 증구는 구도심 슬럼화에 따른 상권 침체와 바닥에 허덕이는 지방재정 여건 하에서 혁신도시 건설이야말로 유일한 희망으로 생각해 왔으며 우리 증구의회에서도 24만 구민의 염원을 담은 혁신도시건설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혁신도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도 자손 대대로 살아온 삶의 터전까지 내어주는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국책사업에 적극 협조해 오고 있다.

이러한 지역현실을 무시한 채 최근 정부에서는 경제활성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하에 전면적인 수도권의 규제완화와 공기업의 민영화 및 통폐합을 연계시켜 수년간 정부와 이전기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로 추진해온 혁신도시 건설을 이제 와서 재검토 운운하는 소모적인 국가균형발전 훼손 논쟁을 중단해야 한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의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의 성장 동력을 갖추어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큰 틀에서 110만 시민의 염원인 혁신도시 건설이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정부는 소모적인 국가균형발전 훼손 논쟁을 전면 중단하고 수도권규제 완화는 지방적 시각에서 충분한 논의와 협의 없이는 절대 불가함을 결의한다.
2. 정부는 혁신도시 근간을 흔드는 공기업 민영화, 통폐합 논의를 백지화하고 전 국민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촉구한다.

3. 정부는 지역주민에게 약속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명확한 입  
장표명과 이미 착수된 혁신도시 조성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4. 혁신도시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24만 중구 주민은 명분과  
실익 없는 공기업 민영화와 혁신도시 건설사업 재조정을 비롯  
한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어떠한 타협도 단호히 배격한다.

2008. 4. 24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일동**